반복되는 충북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신희영 기자 | 승인 2022.04.13 17:41

지방정부는 일터 안전 보장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2일과 5일 음성의 버섯농장과 진천의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두 명의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과 3일 사이에 이주노동자 2명이 연달아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이다.

이번 두 건의 산재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 충북에서만 9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사고는 3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의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뜩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주・하청노동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 2일과 5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사망한 피해자는 이주노동자임과 동시에 하청노동자였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북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13일 충북도청 앞에서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 "충북도는 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사고예방과 노동안전강화를 위해 작년 7월 충북도민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된 노동안전보건조례가 산안법을 넘어서는 내용이라며 후퇴시켰던 노동안전보건조례 원안을 충북도는 기억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안전 조사관, 노동안전 지킴이단을 지금 당장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말하며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선지현 공동대표는 "얼마전 노동자가 돌아가신 공장은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공장이었다. 법으로 지켜야 할 안전장치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풀어놓고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무릎쓰는 노동을 강요했던 공장이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하고 "지난해 제정된 충북도의 노동안전조례에는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건을 위해서 충북도가 돈과 사람을 적용해서 지키겠다고 써 있다.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두겠다고 써 있다. 열악한 노동에 악랄한 사업주를 피해서 사업장을 이동할 권리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정주 노동자보다 3배 이상 죽어가고 있다. 그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는 충북도에게 있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이주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 막고 노동안전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외쳤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얼마전 북이면에서 태국여성이 고철파쇄 작업을 하다 다리가 끼어 허벅지까지 파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주야간 맞교대로 한달에 두 번 휴식을 하는 힘든 노동을 했다. 그런데 임금은 고작 150만원이었다. 이것이 미등록 노동자들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적당히 일 시키다 다치면 대충 치료받게 하고 적당히 보상해서 고국으로 보내버리면 된다는 현실이 계속 반복된다.”며 지역에서 일어난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의 일례를 들었다 “고용허가제로 15개 나라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다치고 두들겨 맞아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데가 없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이제라도 그들이 인간답게 대접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충북도를 향해 △이주노동자 생명안전 보장대책 마련 △이주노동자의 위험 사업장에서 벗어날 권리 보장 △노동안전조례 책임 이행 △일터안전 감시 및 예방단계부터 노동자 참여 보장 △차별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021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차일 피일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와 노동안전지킴이단 제도를 신속히 설치 운영하여 지자체의 책무인 노동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북도를 향한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희영 기자 shy5423@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